

기업 사회공헌 지원을 위한 범부처 역량 결집

- 보건복지부 주관 관계부처 회의 개최, 「기업 사회공헌 지원 방안」 논의 -
- 민관 합동 「민간 사회공헌 혁신위원회」 출범 및 4대 분야 11개 핵심과제 추진
- “기업의 나눔이 국민이 체감하는 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

정부는 2026년 1월 26일(월)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사회공헌 지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국조실, 재경·행안·문화·산업·기후·노동·중기부

이번 회의는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의 기부가 위축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에 정부는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 저출산, 기후 위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기업의 사회공헌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논의된 「기업 사회공헌 지원 방안」은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공헌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수요-공급 매칭 활성화 ▲사회공헌 저변 확대 ▲사회공헌이 인정받는 환경 조성 ▲사회공헌 기반 마련 등 4대 분야·11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 ① (매칭 활성화) 기업의 자원과 현장의 수요(복지 등)를 연결하는 ‘온라인 사회공헌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회공헌 포럼·민관 실무협의체 등 오프라인 소통도 정례화하여 협업 기회를 확대한다.
- ② (저변 확대) 대기업에 비해 정보와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맞춤형 사회공헌 컨설팅을 제공하고, 키오스크 기부, 프로보노를 통한 재능 나눔 등 국민 일상 속 다양한 나눔 방식을 확산한다.
- ③ (인정받는 환경) 공헌 우수기업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사회공헌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객관적·실효적 성과기준을 마련하고, 정부 포상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④ (기반 마련)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계부처·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정책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을 내실화해 나간다.

정부는 오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과제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업의 경영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파트너로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는 견어내고 지원은 확실히 늘려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기업 사회공헌 지원 관계부처 회의 개요
 2. 기업 사회공헌 지원 방안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책임자	과 장	신동호 (044-202-3250)
		담당자	사무관	조승연 (044-202-3259)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복지정책팀	책임자	팀 장	강보람 (044-200-2290)
		담당자	사무관	박수경 (044-200-2299)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진규 (044-215-4110)
		담당자	사무관	정현엽 (044-215-4113)
	재정경제부 경제구조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진민 (044-215-2810)
		담당자	사무관	함진우 (044-215-2811)
사무관	홍단기 (044-215-2814)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	책임자	과 장	홍정우 (044-205-3171)
		담당자	사무관	정희원 (044-205-3181)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홍필 (044-203-2711)
		담당자	사무관	조운범 (044-203-2714)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남경모 (044-203-4210)
		담당자	사무관	김동욱 (044-203-4216)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마재정 (044-201-6210)
		담당자	사무관	조현진 (044-201-6328)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책임자	과 장	김부경 (044-202-7425)
		담당자	사무관	김영진 (044-202-7422)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주화 (044-204-7700)
		담당자	사무관	남경탁 (044-204-7851)



□ 개요

- (일시·장소) '26.1.26.(월) 12:00-13:00,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 오찬을 겸하여 회의 진행
- (참석) 보건복지부 장관(주재), 관계부처*
* 국조실, 재경·행안·문화·산업·기후·노동·중기부

□ 안건

- 기업 사회공헌 지원 추진 방향 보고(복지부)
- 부처별 기업 사회공헌 지원 현황 보고(각 부처)
- 「기업 사회공헌 지원 방안」 부처 의견수렴(각 부처)

□ 시간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1:45~12:00	15'	■ 사전 환담	
12:00~12:02	2'	■ 회의 안내 및 개회	■ (사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
12:02~12:05	3'	■ 인사말	■ 보건복지부 장관
12:05~12:15	10'	■ (보고안건1) 기업사회공헌 지원 추진 방향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12:15~12:40	25'	■ (보고안건2) 기업사회공헌 지원 부처별 추진현황	■ 재경→문화→산업 →기후→노동→중기부
12:40~12:55	15'	■ (논의안건) 「기업사회공헌 지원 방안」 의견수렴	■ 국조→재경→문화→산업 →기후→노동→중기부
12:55~13:00	5'	■ 마무리 발언 및 회의 종료	■ 보건복지부 장관

1 추진배경

- (정책 환경 변화)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등 정부 단독 대응이 어려운 新 사회 위험 대두, 민관 협력을 통한 유연한 대응 필요
 - “각 부처는 ‘그냥드림’과 같은 우수 국민 체감 민간협력 정책 적극 발굴 할 것”(대통령님, ‘26.1.15), “기업 사회공헌 정부 지원 필요“(총리님, ‘25.12.24)
- (기업 환경 변화) 국내외 ESG 의무화, 고객의 가치소비에 대한 관심*, 글로벌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 → 사회공헌은 기업 경영 핵심 요소
 - * MZ세대의 64%는 사회적 가치 실천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의향 응답(딜로이트, ‘24)
- (패러다임 전환) ‘일회성 자선·기부’ → ‘사회적 가치 창출, 구조적·통합적 사회문제 해결’로 전환 중 (딜로이트, ‘18)

2 현황 및 문제점

- (글로벌 현황) 팬데믹 이후 증가* 추세, 구조적 사회문제 해결 강조
 - * 美 기업 기부: 290억불(‘20)→365.5억불(‘23), 佛 기업 기부: 23.1억 유로(‘20)→29.3억 유로(‘23)
- (국내 현황) 국내 기업 사회공헌 참여는 절대·상대적으로 감소 추세*, 대기업·중소기업 간 높은 사회공헌 격차**
 - * 연 기업 기부액(조원)·총 기부금 대비 비중: (‘14)4.9 (38.0%) → (‘19)5.3 (36.5%) → (‘23)4.5 (28.0%)
 - ** 평균 기부액: 대기업 20억원, 중소기업 0.4억원(금감원, ‘23)
- (문제점) ▲참여 주체별 정보·역량 격차, ▲사회공헌 지원 인프라 부족
 - 정부-기업-단체·기관 간 정보공유·소통 부재, 중소기업 참여 역량 미흡
 - 정부 부처 간 협업 및 효과적 지원 체계 부재는 또 다른 장애물



- 사회공헌 외적 장애 요인으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이 44.2%로 1위
- ▲사회공헌 규제·회계제도 개선, ▲세제혜택 강화, ▲임팩트 투자 여건 조성 → 관련 법·제도 개선 요청
- 의지가 있어도 어느 분야에 어떻게 공헌할지 불확실, 정부 정책 확인 곤란 → 전 부처를 아우르는 **정보 플랫폼 요청**

* 대통령님 주재 기부 나눔 기관 간담회(‘25.12.16), 복지부-법인·기업 사회공헌 관계자 간담회(‘25.8.21/10.1)시 현장 의견

③ 추진방향

- 기본방향: ①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공헌 생태계 조성
 ②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우수 사회공헌 발굴·확산
 ③ 인프라 확충으로 사회공헌 지속가능성 확보
- 과제체계: 4대 분야별 11개 핵심과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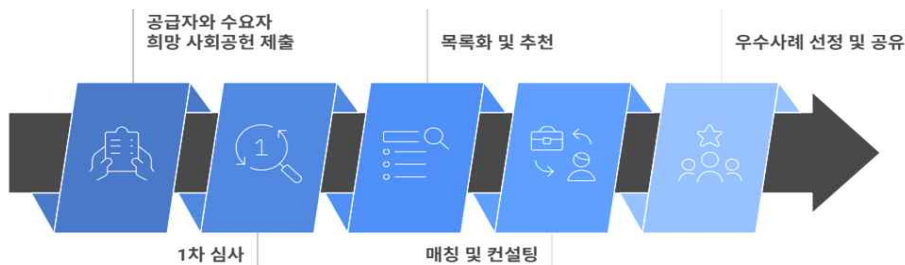
분야	수요-공급 매칭 활성화	기업 사회공헌 저변 확대	사회공헌이 인정받는 환경 조성	사회공헌 활성화 기반 마련
과제	① 온라인 플랫폼 신설·운영 ② 오프라인 매칭 기회 확대 ③ 사회공헌 정보 공개 확대	④ 사회공헌 분야 확대 ⑤ 중소기업 지원 등 주체 다변화 ⑥ 다양한 방식의 일상 나눔	⑦ 실효적 인센티브 제공 ⑧ 사회공헌 평가 내실화 ⑨ 사회적 인식 제고	⑩ 범정부 사회공헌 거버넌스 구축 ⑪ 사회공헌 지원 인프라 구축

④ 주요 핵심과제

분야1 : 정보 공유 강화를 통한 수요-공급 매칭 활성화

- ①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사회공헌 매칭 플랫폼'* 신설, 수요자 - 희망 기업 간 매칭·협업 지원 및 컨설팅('26 기존 DB 개편, '28 통합 플랫폼 개통)

<(가칭) 사회공헌 매칭 플랫폼 운영 프로세스(예시) >



- ② (오프라인 매칭) 민관 협의체*(^①포럼+^②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①정부·기업·공익재단 고위급 관계자 참여, 연간 협의체 성과 및 차년도 계획 공유

** ^②정부·민간 사회공헌 담당자·전문가 참여, 정부-민간 사회공헌 수요-공급 매칭

- ③ (정보 공개 확대) 정보공시 가이드라인+우수 기관 정보 → 탐색 비용 절감

분야2 : 사회공헌 다변화를 통한 저변 확대

- ④ (분야 확대) 新 사회 위협에 대한 임팩트 투자, 글로벌 공헌 활성화*를 통해 국내·저소득층에 편중된 기업 사회공헌을 다양한 분야로 확장

* (임팩트 투자) ▲ 투자 교류 활성화 ▲ 기부금 기반 임팩트 투자 펀드 조성 ▲ 한국형 raiSE 펠로우십 (글로벌 공헌) ▲ 글로벌 사회공헌 전략회의 ▲ 글로벌 사회공헌 규모 확대

- ⑤ (주체 다양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CEO 포럼 등 공헌 역량 강화

- ⑥ (방식 다변화) 키오스크 활용 '천원의 기부' 캠페인(현금), 그냥드림 식품 기부*(현물), 기업 임직원 무료 경영 자문(재능) 등 다양한 일상 나눔 활성화

* 신한금융(3년 45억원), 한국청과(1년 2억원) 현금 기부 확정, 농협 등 추가 민간 협업 지속 추진 중('25.11~, 복지부)

분야3 : 사회공헌이 제대로 인정받는 환경 조성

- ⑦ (인센티브) ①법·제도 개선(지역사회공헌 인증제 내실화 등), ②기반 확충 (ESG 활용도 제고), ③포상 강화(지역사회공헌제 등)

- ⑧ (평가체계) 사회공헌 평가지표 개발 → 타 지표(K-ESG 가이드라인* 등)와 연계하여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객관적·실효적 성과기준 마련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 우리 기업의 ESG 실천을 위한 기업 자체 진단 가이드라인

- ⑨ (국민인식제고) 기업 사회공헌 중요성·성과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민관 공동 사회문제 해결(예: 그냥드림)을 통한 국민 체감 제고

분야4 :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기반 마련

- ⑩ (거버넌스) 정책 일관성·체계적 지원을 위한 '민간 사회공헌 혁신 위원회'*(복지부장관 주재) 구성 및 사회공헌 지원조직 운영 추진

* 사회공헌 전략 수립, 법·제도 개선, 우수사례 발굴·확산, 인센티브 확대 등 추진

- ⑪ (지원 인프라) 정부 주도 실태조사, 사회공헌센터 역량 강화 등

⑤ 부처 협업 과제 : 정부 협의체(가칭 '민간 사회공헌 혁신위원회') 구성

- ① (목적)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사회공헌 정책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민간 사회공헌 생태계 활성화
- ② (구성)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 ▲관계부처 차관(7인) ▲기업 임원(3인) ▲공익법인 관계자(3인) ▲학계 전문가(3인) 등 위원 16인

<(가칭) 민간 사회공헌 혁신위원회 부처별 주요 역할 >

【복지부】 기업 사회공헌 지원 총괄	【행안부】 기부·의연금품 모집 활성화
【재경부】 기업 사회공헌 세제 검토	【노동부】 사회적기업 민·관 자원 연계 방안
【산업부】 지속가능경영 지원 방안	【중기부】 사회공헌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문체부】 문화예술 분야 민간후원 기반 강화	【기후부】 탄소중립을 통한 사회가치 창출

- ③ (논의과제)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센티브 확대, 부처 간 사회공헌 지원 정책 조율·연계

- (법제 개선) 공익법인 기본재산·관리 감독, 공익목적투자 활성화 등 (재경·법무·복지부 등)
- (세제·인센티브) 기업 사회공헌 관련 세제 검토, 사회공헌 포상 강화 (재경·행안·복지부 등)
- (정책 연계) ESG 중 “S” 실천 기반 확대, 부처별 사회공헌 지원책 연계 (행안·산업·복지·기후·노동부 등)

- ④ (운영) 반기별 정례회의(연 2회,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 (절차) 사전 안전접수·검토 → 회의 개최 → 결과 공유 및 이행 점검
- (안전) 기업사회공헌 지원 및 민관협업 관련 부처 간 협업·조정 사항

⑥ 향후 추진계획

- 정부-기업-기관 등 참여하는 사회공헌 포럼 개최(‘26.2월(잠정))
- 범부처·기업·전문가 참여 ‘민간 사회공헌 혁신위원회’ 구성(‘26.1분기)
- 제1차 민간 사회공헌 혁신위원회 개최 및 세부 지원방안 마련(‘26.上)